

INFO LETTER

#

지금 법·정책은?

디지털성범죄 대응 국내외 법률·정책 현황 및 소식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확대 시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을 7월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힘에 따라, 사전조치의무사업자(웹하드 및 매출 10억 원·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부가통신사업자)들은 불법촬영 영상물뿐 아니라 영상물의 정치상(이미지)까지 의무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동영상과 이미지를 구분하지 않고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조치는 이미지 식별 기술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적용 범위를 넓힌 것입니다. 방미통위가 불법촬영물로 이미 심의·의결한 파일의 특징값을 데이터베이스(이하 DB)로 구축해 두고, 이용자가 이미지를 업로드 하려 할 때 해당 이미지의 특징값을 DB와 자동 비교해 동일한 불법물의 재유포만을 걸러내는 구조로 일반 이용자의 정상적인 콘텐츠 업로드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미통위는 플랫폼 업계의 시스템 준비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6개월간 행정 제재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자세한 조치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고시 제 2026-11호)은「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5에 따라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갖춰야 할 구체적인 조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 1 신고·삭제 시스템을 상시 운영해야 합니다.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이용자가 전화·이메일·홈페이지 등을 통해 언제든지 불법촬영물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 기능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해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불법촬영물로 판단되는 즉시 접근을 제한하고, 14일 이내 신고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 2 검색 단계에서부터 걸러내야 합니다.

제목필터링이나 문자열비교 등의 방식으로, 불법촬영물 검색에 자주 쓰이는 단어가 검색결과나 연관검색어로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3 게재 전 식별 기술을 상시 적용해야 합니다.

국가기관이 제공하는 기술, 또는 최근 2년 이내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적용해 이용자가 올리려는 콘텐츠를 식별합니다. 불법촬영물로 식별되면 게재가 제한되고, 설정 당시 걸러지지 않았더라도 추후 인지하면 자체 없이 삭제·차단해야 합니다.
- 4 기록은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기술적 조치 운영·관리에 대한 로그기록을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지난 6월 25일, 행정안전부·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협약은 AI 악용 딥페이크 성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업체 개발한 'AI 딥페이크 탐지·분석모델'을 관계기관과 공유해 피해영상을 탐지·분석부터 삭제·차단, 피해자 보호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전 과정에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역할을 나눠 유기적으로 협력합니다. 행안부는 AI 탐지·분석모델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성능을 개선하며, 성평등가족부·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영상을 삭제·차단 및 피해자 지원기관과의 연계를 담당합니다. 방미통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콘텐츠의 재유포를 방지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정부는 본 협약을 계기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전 과정에 AI 기술을 연계해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며, 협약 유효기간은 3년으로 만료 후에는 별도 종료 의사가 없는 한 1년씩 자동 연장됩니다.

#

함께 읽어볼 자료

디지털성범죄 관련 연구 및 간행물 요약정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술매개 젠더기반폭력 대응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2026)

원저: Policy Brief: Harnes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o Address Technology-Facilitated Gender-Based Violence in Asia and the Pacific
(UN Women ~ Asia and the Pacific)(안수정, 이아정, 김종범)

생성형 AI 도구의 사용이 쉬워지면서 악용 사례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비동의 성적 이미지 및 음란물 제작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딥페이크로 대표되는 기술기반 젠더폭력(Technology-Facilitated Gender-Based Violence, 이하 TFGBV)은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유엔여성기구(UN Women)가 발표한 정책 보고서「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술매개 젠더기반폭력 대응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은 AI가 TFGBV 가해 도구인 동시에 피해 대응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합니다.

보고서는 AI가 포용적으로 설계되고 윤리적으로 관리될 경우, AI가 온라인 학대에 대한 안전장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TFGBV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대응 도구로서 AI가 탐지, 예방, 그리고 딥페이크 생성물을 의도적 손상 및 왜곡하는 세 가지 접근 방식의 설명이 있습니다.

1 탐지	현재 널리 쓰이는 딥러닝 기반 생성 모델 ¹⁾ 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일정하게 반복되는 흔적을 남기는데, 탐지 알고리즘은 이런 패턴을 학습해 합성 콘텐츠를 식별해낼 수 있음. 이러한 흔적이 존재하는 한, 다양한 데이터로 꾸준히 학습시킬수록 탐지 시스템의 성능도 계속 향상될 수 있음.
------	---

2 예방	AI 모델 자체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유해하거나 동의 없는 콘텐츠가 생성되지 않도록 함. OpenAI나 Adobe 같은 기업들은 누드나 성적인 이미지의 생성을 차단하는 필터링 기술을 이미 도입하고 있으며, 콘텐츠 생성 전후 단계에서 작동해 결과물을 자동으로 검열·수정하거나 처음부터 그런 콘텐츠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AI 내부에 윤리적 제약을 심어두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다만 오픈소스 모델이나 별도로 미세조정된 상업용 모델 대부분은 여전히 거의 제한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의 효과는 제한적임.
------	---

3 의도적 손상 및 왜곡	이미 만들어진 불법적인 딥페이크물의 품질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결함이나 부자연스러운 흔적을 의도적으로 이미지에 삽입해 결과물의 신뢰도를 낮추는 방식임. 실제로도 보이지 않게 해 딥페이크의 완성도와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악의적인 제작자나 유포자들이 애초에 이런 콘텐츠를 만들거나 퍼뜨릴 동기를 약화시키는 억제효과를 내고자 함.
---------------	--

또한, 보고서는 AI 도구가 TFGBV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가령 알고리즘은 온라인상의 행동 패턴을 모니터링해 그루밍, 반복적인 괴롭힘, 유해 콘텐츠 유포 같은 의심스러운 계정을 미리 포착하고, 피해가 본격화되기 전에 이용자에게 경고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지 인식과 웹크롤링 기술을 활용해 플랫폼 내 비동의·불법 이미지를 찾아내고, 삭제 요청을 자동으로 제출·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AI 챗봇을 활용한 피해자 상담지원 등 여러 가지 대응 도구로서의 활용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렇듯 AI는 TFGBV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잠재력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기술적 안전장치, 규제 체계, 공공 교육을 결합한 조율된 전략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AI 시스템의 설계와 개발 단계에서부터 젠더 관점을 통합하는 근본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AI가 포용적으로 설계되고 윤리적으로 관리될 때, 보다 안전한 디지털 공간을 구축하는 강력한 도구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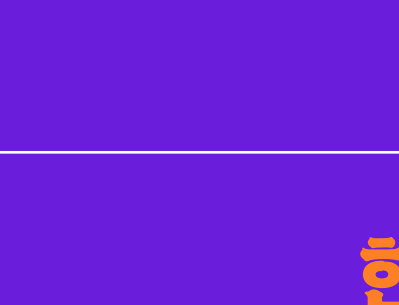
1) 무작위 노이즈를 점진적으로 변환시켜 이미지, 영상, 소리와 같은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생성형 AI의 한 유형

[바로가기](#)

정책전문지「인사이트」1·2호 소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디성센터)에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정책 대국민 공감대 형성 및 정책 효과성 확산을 목적으로 디지털성범죄 대응 정책전문지「인사이트」를 발간 중에 있습니다.「인사이트」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공식 홈페이지 간행물 메뉴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2026년 연간 4회 발행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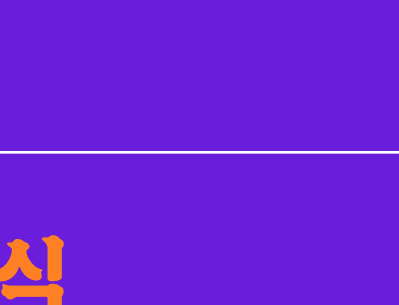
정책전문지 1호



AI 활용 디지털성범죄 사례
분석 및 안전한 AI 활용 방안

[바로가기](#)

정책전문지 2호



디지털성범죄 판례 분석을 통한
피해자 지원 발전 방안 모색

[바로가기](#)

정책전문지「인사이트」확산 이벤트

- ▶ 참여 기간 2026.7.10.(금) ~ 7.20.(월) 23:59
- ▶ 참여 방법 카드뉴스 속 5문제 확인 후 응모 폼 정답 입력
- ▶ 경품 편의점 모바일상품권 5,000원권 (100명)

[이벤트 참여하기](#)

#

현장 소식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소식 이모저모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사례

▶ 연대와 소통으로 이어가는 피해 예방·지원

경북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경북디성센터)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일상과 회복 과정을 다룬 영화「까만점」상영회를 개최했습니다. 상영회 이후에는 영화 감독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해 작품의 의도와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및 예방 지향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현장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시민들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경북디성센터는 도내 여성단체 및 피해자 지원단체와 연대해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해 엄정한 판결을 촉구하였으며, 도내 피해자 지원단체와 MOU를 체결하는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지원에 꾸준히 힘쓰고 있습니다.

(경북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지속적 연락으로 이어간 피해자 지원

피해자는 충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충남디성센터)를 통해 법률상담 및 피해지원을 받았으나, 초기 상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한동안 연락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충남디성센터는 정기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며 상담을 지속하였고, 피해자가 기관을 신뢰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충남디성센터는 피해자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꾸준히 연락을 취하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충남디성센터는 올해 상반기 유관기관 간담회 진행 및 17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앞으로도 피해자 지원에 힘쓰고자 합니다.

(충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피해자 지원 연계 기반 마련

전북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전북디성센터)는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지원 네트워크 간담회를 통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방법과 연계 지원 건에 대한 지속 지원 방향,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간담회를 통해 전북디성센터만의 '디지털세이프가드' 사업을 소개하며 전북디성센터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각 기관 담당자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향후 피해자 지원 연계와 업무 협력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북디성센터는 피해자 치유회복을 위한 온라인 집단상담 프로그램 '다독다독다독회'를 진행하고, 지역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안전박람회를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북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소식

중앙 및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마스코트 개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정책 확산에
활용할 수 있는 마스코트 캐릭터를 개발하여
새롭게 선보입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매뉴얼 개발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6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매뉴얼」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